

국내 낙농산업, 시유시장과 국산유제품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필요



배 정 식
본회 상무

1. 들어가며

연말을 향하고 있지만 원유잉여문제로 시끄럽다. 예년보다 따듯했던 겨울 날씨와 선선한 여름날씨로 인해 원유생산량이 증가했다. 소비도 줄었다. 구제역 이후 쿼터를 남발했던 집유주체들이 지금은 더 곤욕스러운 입장이다. 수급 조절협의회 감축권고안을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많았다. 결국 집유주체별 자율대책 추진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해의 끄트머리지만 원유수급문제는 아직 진행중이다. 협회는 올해 신사업으로 K·MILK 사업을 출범시켰다. 백프로는 아니지만 유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상생의 기틀이 만들어 졌다. 소비자에게는 알권리 충족으로 편익을 증대하고, 유업체는 국산원료의 차별화로 제품의 가치증대와 경쟁력강화, 낙농가에게는 낙농기반유지가 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 저명인사인 인요한 박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국회에서는 K·MILK 상생협력 협약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K·MILK 사업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호주, 캐나다와 FTA 체결이 이뤄지고 국회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낙농 최대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도 체결되었다. 한미 FTA, 한EU FTA에 이은 종결관인 셈이다. 축산단체들은 10.23일 영연방 FTA 반대 축산인 총결기대회를 열고 국회앞에서 보름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분주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책자금금리인하, 무허가축사개선대책, 낙농대책들을 끌어내는 소득이 있었다. 국회 상임위와 대정부질의에서도 낙농, 축산문제들이 거론되고 부각되었다.

2.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1) 원유가격연동제 도마위에

5월말 통계청의 생산비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원유가격연동제는 올해 인상분 25원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연동제의 한계 속에 유업체는 원유수급상황을 연계해 올해 가격인상의 어려움을 제기했고 연동제 개선을 요구했다. 격론 끝에 생산비변동액이 4% 이내일 경우에는 누적연동제 개념으로 다음해로 넘겨 2년에 한번씩 원유가격을 조정기로 하였



다. 가격협상 범위를 원유기본가격 변동액의 10%로 설정해 협상위원회에서 가격협상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인상분은 유보되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된다. 기준원가인 생산비차액분과 소비자물가상승분에 따른 변동원가를 더해 산출토록 되어있다. 올해의 경우로 설명하자면 원유기본가격 변동액 25원을 기준으로 10% 범위인 22.5원~27.5원 범위내에서 협상을 통

해 가격결정을 하는 구조로 바뀐셈이다. 여기서 정해진 금액과 현재 원유기본가격 940원이 더해지면 새로운 원유기본가격이 되는 것이다. 내년엔 원유기본가격 변동액이 10원이면 올해 유보된 25원에 더해 35원을 기준으로 협상범위인 31.5원~38.5원 사이에서 협상을 하게되고, 반대로 -10원이면 유보된 25원에 더해 15원을 기준으로 협상범위인 13.5원~16.5원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변동액이 4% 미만이라도 2년에 한번씩은 원유기본가격이 조정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금번 연동제 합의사항에 따라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유통업체로 구성되는 가칭 ‘유제품가격 조정협의회’ 설치에 공정거래위반 저축 우려가 있어 설치가 유보된 상태다. 원유기본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인상에 민감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0.21일 ‘원유가격 연동제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소비자측에서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연동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도한 유통마진은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기본적으로 연동제는 낙농기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제도이지만, 낙농가 제조유통업체, 소비자가 모두 공생하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향후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제품가 변동

에 소비자단체들의 반발불씨는 살아있는 상태다.

(2) 우유수급상황 악화, 원유감축에만 초점

장관 훈령으로 각 품목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급조절협의회는 원유잉여와 관련 지난 해보다 올해 생산이 증가된 113,000톤에 대해 감축권고안을 상정하여 집유주체별로 감축을 추진하였다. 지난해 생산량이 209만톤, 올해 생산량이 약 22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측 대표들의 반대로 안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종전대로 집유주체별 자율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난겨울, 여름 온화한 날씨가 생산량을 증가시킨 원인이 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원유잉여문제를 정부나 유업체 고통분담없이 단순히 농가생산감축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협회이사회의 결론이었다. 사실 수급문제 발생은 농가의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연히 수급안정을 위한 농가들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잉여문제에 대한 본질과 원인파악 없이 모두 낙농가 책임으로 모는 것은 안 된다. 현재 집유주체별로 감축대책들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 연간총량제는 실시가 폐지되었고, 초과원유가격인하, 구제역이후 부여된 (버퍼)쿼터감축에 나서고 있다. 낙농수급조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인 형평성에 맞는 대책들은 현재와 같은 집유체계 속에서는 사실상 요원하다. 본질로 돌아가보면 문제는 우유소비확대다. 근본적인 소비확대 방안 없는 대책들은 무용지물이다. 협회에서는 이번 축산인권기대회를 통해서도 우유소비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학교급식 제도화를 비롯한 산업체 단체급식, 수출확대를 위한 자조금사업 지원, 경찰병력 급식, K·MILK 사업지원을 요구하였고 현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유소비위주의 국내 낙농산업은 제도적인 소비확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소비확대를 꾀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K·MILK 사업 출범

K·MILK사업은 지지난해부터 추진을 검토해 지난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인증마크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K·MILK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바로 국내유제품시장 형성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의미다. 소비자조사를 통해 밝혀진 인식조사에서 유제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비율이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연히 국산우유 원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우유에 대한 차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유업체도 결국 국산원료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값싼 수입원료에 의존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속에 출범한 것이 ‘국산우유사용인증’ 사업이다.

1. 인증마크 개발 및 특허출원

지난 6월 K·MILK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원장을 인증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사업내역을 확정짓고, 사업설명회, 사업공고, 심사를 통해 1차 총 8개업체 213개 제품과 2차 6개업체(신규업체 4곳) 35개 제품에 대해 K·MILK 인증마크가 부여되었다. 지난 9.29일 국

회에서 K·MILK 상생협력 협약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우리협회와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 농식품부, 소비자단체, 유가공협회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는 여당대표와 다수의 국회의원, 농식품부 장관, K·MILK 참여업체 CEO 들이 참석하여 케이밀크 사업 출범의 시작을 알렸다. 서두에 밝혔듯이 케이밀크사업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모두의 상생을 위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

(4) 여·야·정 협의체 최종 합의 이끌어내

축산업계 올해 최대이슈는 영연방 FTA 대응이었다. 축산단체들은 공동으로 9대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축산업 희생대책을 촉구하였다. 9대 요구사항은 축산정책지원금리 인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허가축사 양성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낙농부문 지원대책, 도축장 전기료 농사용 적용, 영농상속공제 확대,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지원대책 마련, 사료가격안정대책이다.

지난 11.13일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이 발표되었다. 금리인하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8%로 인하하고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은 2%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무허가축사는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 40% 이내로 경감하고, 축사지붕재료 규제완화로 가설건축물 지붕재질에 갈바늄을 50%이하로 포함시켰다. 도축장전기료는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향후 10년간 전기요금을 20% 인하하기로 하였다. 농가사료 직거래자금도 4천억으로 확대되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에서 15억으로 상향되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기로 하였고 향후 보완대책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무역이득공유제는 법제화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 검토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낙농부문지원대책 관련해서 수출확대를 위한 우유자조금 지원확대,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추진, 의경 우유급식 실

시 지원내용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5대그룹과 농축산단체간 MOU체결을 통해 대기업 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제고도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금번 대규모 축산인 총궐기대회는 사상 처음 개최되었고, 우리 낙농가족들은 대거 4천명이상 참석하여 궐기대회의 주축을 이뤄 다시 한 번 낙농육우인의 단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맺음말

문제는 우유소비다. 국내 우유시장은 시유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시유소비가 줄면 낙농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시장시유 축소는 불가피하다. 국산원료를 사용한 유제품시장도 거의 고사 직전이다. 앞으로 국내 우유시장이 시유로 계속 국한된다면 낙농기반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시유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과 국산유제품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이원화해 대응해야 한다.

백색시유는 제도적인 소비확대를 통해 꾀하고, 국내유제품시장 형성은 K·MILK를 통해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협회는 보다 세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완료하고, 새해에는 K·MILK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려 한다. 중국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해답도 K·MILK다. 우유소비확대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자중심의 낙농대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FTA 개방과고가 문턱을 넘기 전에 제도수립에 열어야 한다. 더불어 가축분뇨법과 대응한 환경문제, 무허가축사문제는 축산단체와 연계해 정부대책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목장경영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R&D활성화들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향후 FTA 대책으로 K·MILK 지원사업, 수입유제품에 부과시켜 국내 유제품시장 확대를 위한 기금조성, 학교급식 제도화, 산업체 우유급식확대, 대중국시장 판로확대를 꾀한다면 분명 어디서든 신의 한수는 나올 것이다. 어려움 속에 연말을 맞고 있지만 희망을 의심하지 말자. ☺